

K-반도체·자동차 ‘불확실성’ 확대 코스피 대장주들, 주가 급락에 고전

트럼프發 변동성 심화

美 보호무역·반도체 제재 우려
삼성전자·현대차 주가 큰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들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등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약세를 보이며 2거래일 동안 4.80% 하락했다. 올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순매도한 종목으로 꼽히는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은 이날 기준 약 51%대로 점점 낮아지고 있다. 지난 7월에는 56%대에 머물렀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 바이든 현 미 행정부의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락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 상무부로부터 보조금 확보를 통보받지 못한 상황이다. 전날 SK하이닉스도 4.97% 떨어졌으며, 이날도 4.28% 하락 마감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오늘도 동반 하락하며 지수 하방 압력을 부여했다”며 “전일 보조금 재검토에 이은 미국발 악재가 이어지는 등 국내 반도체 투심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블룸버그 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에 반도체 장비 및 인공지능(AI) 메모리칩 판매하는 것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제재에는 고대역폭 메모리칩에 대한 조항들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hatGPT에 의해 생성한 ‘코스피 대형주 반도체·자동차 종목들의 악세’ 이미지.

마이크론과 같은 주요 메모리칩 제조업체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됐다. 다만 소식통들은 공식 발표 전까지는 규제 내용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기업뿐만 아니라 자동차 기업들도 ‘트럼프 리스크’로 인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되면서 코스피 대형주들이 휘청거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첫날 바로 멕시코·캐나다에 각 25%, 중국에는 추가 관세 10%를 더하게 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는 국내 수출 기업, 특히 멕시코와 캐나다에 공급망을 둔 자동차 기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미 대선을 앞두고 둔 지난달 말부터 이달 13일까지 현대차의 주가는 9.34%, 기아는 3.51% 하락했다.

다만 미국의 자동차 관세 25% 부과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캐나다에 연결고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유지웅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멕시코는 GM의 경우 70만대, 스텔란티스는 30만대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한

다. 이중 픽업·SUV 등 대형 차종을 포함하고 있어 미국 자동차 산업에도 큰 타격이 발생하는 구조”라며 “이 경우 부품 공급망(씨플라이체인)이 모두 훼손되기 때문에 멕시코에 생산거점이 없는 테슬라도 공급망 차질을 겪을 수 있고, 현실화는 불가능한 구조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현대차는 전날 주주환원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자기주식 매입 결정을 공시했다. 보통주 390만7000주, 기타주 75만9000주 등 총 466만6000주다. 이는 취득 주식은 총발행주식의 1.7% 수준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투심을 되돌리지 못한 채 주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현대차는 전 거래일보다 0.90% 떨어지며 2거래일 연속 약세를 이어갔다.

다만 유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업종은 연말로 갈수록 주가 심리 개선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밸류업, 실적 서프라이 등 모멘텀 존재한다”며 “관세 이슈로 나타난 주가 변동성은 매수 기회로 활용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이재명 “주식시장 불공정 문제 해결해야”

거래소 방문해 ‘상법 개정’ 의지 표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법 개정안을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국거래소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 경제산업 정책에 대해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어 보인다”며 “용산이 아무리 무능해도 각 부처들이 움직여 주면 좋겠는데 복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400만 투자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대해 실망하고, 해외 주식시장으로 발걸음 옮기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결국 우리 주식시장에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이고, 누군가 수익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시장의 불공정에 대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의 장기간 침체 원인으로 ▲경제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지배경영권 남용

▲안보 위기 등을 꼽았다.

그는 “똑같이 투자했는데 대다수가 손해를 보고, 시장의 신뢰가 떨어진다”며 “대표적인 게 ‘주가조작’”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가조작으로 수십 억이 주머니에 들어왔다고 해도 힘세고 권력 있으면 처벌도 안 받고 이익을 늘릴 수 있다. 이걸 전세계에 광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가조작 등 시장 내에서 불공정한 일이 발생하면서 선량한 투자자 대다수가 피해를 보고, 투자를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상법개정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맞는데 (국민의 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이라고 쪽에 맡기면 될 리가 없다”며 “포괄적 개정인 상법 개정을 통해, 핵심은 이 사회의 충실 의무 개선, 그외 주주평등권리 보장, 지배·경영권 남용 방지 등을 정기국회 내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KB운용, 연 7% 고배당 ‘발해인프라’ 상장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

KB자산운용 대표인프라펀드 ‘발해인프라투자회사’ (KB발해인프라)가 29일 코스피에 상장한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인수물량을 상장 일로부터 3개월간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최초 토종 공모 인프라펀드 ‘KB발해인프라’는 유료도로와 터널,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SOC)에 주로 투자한다. 현재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남양주 수석-호평간도로 ▲서울 용마터널 ▲부산 산성터널 ▲수원의곽순환(북부)도로 등 연간 약 1억8000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우량 유료도로 자산의 운용 수익을 배당하고 있다.

토종 인프라펀드로는 1호 상장 사례

인 KB발해인프라는 2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앞서 KB발해인프라는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에서 3.99대 1의 결과를 받았다. 이에 따라 주관사단은 공모 규모를 80%로 축소하고 일반청약을 진행했으며, 청약 경쟁률은 0.26대 1 수준으로 마무리됐다.

대표주관회사인 KB증권을 비롯한 키움증권, 대신증권 등 주관사단은 지난 27일 향후 수급 조절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KB발해인프라 일반청약 미매각 물량을 3개월간 매도하지 않고 자발적 의무보유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증권발행실적보고서에 추가했다.

주관사단의 자발적 의무보유 인수물량을 감안하면 KB발해인프라의 상장 직후 유통 비율은 7.4%로 낮아진다.

/신하은 기자

이복현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금융감독원장)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 변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확실성 해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면서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 개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더욱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기존 입장을 선회했다. 이는 기본법인 상법의 특성상,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개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현행법상 기업 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로 한정하는 상법 조항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지만, 재계는 상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 1층 로비에서 ‘금융감독원장-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마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법 개정이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왔다.

금감원은 사전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해관계자가 많은 기본법(상법)을 개정하는 대신 자본시장법을 개정할 경우 상장법인의 합병 등에서 주주 보호 원칙을 특별 규정으로 신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주주 보

호 원칙을 적용하면 일정 절차를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거래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면책이 보장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현재 상장법인은 2400여 개 정도이고 상장법인 규율 체계를 두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법”이라며 “자본시장과 관련성이 상당히 낮은 100만개 가 넘는 (비상장) 기업 모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 있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이어 “주주 보호 원칙을 자본시장법에 절차적으로 먼저 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병이나 분할 등의 적정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원칙과 평가 적정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절차를 준수하면 자연스럽게 이사회 면책이 보장되어 오히려 적극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 웨어칸 인수로 인도 시장 공략

“5년 내 현지 5위 증권사 목표”

미래에셋증권은 지난 2017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인도 자본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6년 만에 국내 최초로 현지 기업 인수를 완료했다.

28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해 12월 웨어칸 리미티드(Sharekhan Limited)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인도 중앙은행(RBI)과 인도 증권거래위원회(SEBI)로부터 기업결합 승인을 받아 이날 인수를 마쳤다.

미래에셋웨어칸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도 현지 증권사 웨어칸은 지난 2000년에 설립돼 310만 명이상의 고객, 120여 개 지점 및 4400명 이상의 비즈니스 파트너를 보유하고 있

는 현지 10위권 증권사다.

이번 인수로 인도 WM사업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미래에셋의 글로벌 전문성을 활용하여 그룹차원의 비즈니스 시너지를 창출해 5년 내 인도 현지 5위 증권사로 발돋움할 계획이다.

미래에셋증권이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르면, 올해 인도 웨어칸 인수를 시작으로 글로벌 사업에서 연간 1000억원 이상 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기자본의 40%를 배분한 글로벌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해 오는 2027년부터 글로벌 사업 세전 이익 5천억 원 이상을 창출할 것으로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